한나라 합동유세 중단 책임론 공방

朴 "광주·전남 주민에 약속 깨뜨린건 잘못"
李 "당 결정에 억지 쓰는건 네거티브 전형"
홍준표 "이명박 하자는 대로 다 해 주나"

한나라당이 24일로 예정했던 광주 합동 연설회 등 유세일정을 잠정 연기한 당 지도부 결정을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은 이날 당사에 몰려와 지도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진입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갈등은 '박근혜·원희룡·홍준표 대 이명박'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유세 일정 연기에 대해 세 후보가 '이명박 편들기'의 노골적 행위로 간주하고 당 지도부의 '중립성'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동반 사퇴 주장도 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김재원 대변인을 통해 "합동 연설회 무기 연기는 공당에서 대의원·당원 뿐 아니라 광주·전남 시도민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경선규칙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TV토론과 이제는 합동연설회에 이르기까지 특정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고 당은 이를 수용해 가고 있어, 향후 당에서 TV토론과 합동연설회를 정해진 일정대로 제대로 지켜나갈 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지도부에 경고했다.

박 전 대표 측의 홍사덕·안병훈 공동위원장, 최병렬 전 대표 등은 이날 오전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잠정 중단'이라고 언론에 제목이 뽑히게 한 것은 우리 쪽의 리듬도 리듬이지만,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수권 하려는 정당에 이 정도의 관리능력도 없느냐는 오해를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명박 당이 아니냐. 이명박 후보가 하자는 대로 (지도부가) 다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려면 뭐하려고 경선을 하는가"라면서 "이명박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기탁금을 돌려주고 이 후보 혼자 남기고 다 사퇴해 버리는 게 낫다"면서 이 후보를 정조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시장 측 장광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합동연설회의 '잠정 중단결정'에 대한 박 후보 측의 반응이 기가 막히다"면서 "고뇌에 찬 당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당화'니 '자신이 없으니 토론회 횟수를 줄이고 연설회도 피하려 한다'느니 억지를 쓰는 것은 네거티브의 전형이고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박형준 대변인도 "박 전 대표 측이 이런 것을 빌미로 경선판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반문한 뒤 "오늘이라도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면 26일 유세 일정부터 정상화될 수 있는데 왜 그리 호들갑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광주·경기·인천·경남·대전·충남·전북 등의 지역은 합동연설회장이 협소해 선거인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장소를 새로 물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24일 오후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나라당 합동연설회가 취소되자 행사 장소인 광주 구동체육관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를 성토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李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공개… 의혹 해소될까

세금 등 빼고 금융자산 형태 유지
검찰 수사와 일치 여부 초미 관심

"이상은 152억·김재정 119억 보유"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24일 최근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도곡동 땅'과 관련, 지난 1995년 6월 포스코개발에 매각한 이후 현재까지의 관련 자금흐름을 공개했다.

현재 '포스코트'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도곡동 땅은 매각 당시 등기부등본상 이 전 시장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소유로 돼 있었으나 범여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실소유주가 이 전 시장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당내 경선에서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처남 김씨가 의혹을 제기한 박 전 대표측 일부 의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전 시장측의 이날 주장과 검찰 수사결과가 일치할 지 주목된다.

◇"세금, 사업자금, 투자에 전액 사용"=캠프측이 이날 공개한 '자금 흐름도'에 따르면 이상은 씨와 김재정씨가 지난 1995년 6월 2일 포스코개발에 도곡동 땅을 팔아서 받은 263억원은 현재 271억7천500만원으로 불어났으며, 두사람이 각각 151억9천500여만원과 119억8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즉, 당시 매각대금 가운데 세금납부액을 비롯해 생활비, 각종 투자손실 등을 제외하고는 단한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두 사람의 금융계좌에 남아있다는 게 이 전 시장측 주장의 요점이다.

매각 당시 납부한 세금(양도세, 주민세)은 총 34억9천800만원이었으며, 이를 제외하고 남은 매각대금 가운데 대부분은 생명보험사 투자상품(200억원)과 두 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본금(22억9천700만원)으로 납입됐다. 이밖에 5억원은 김씨가 사업자금과 은행적금 가입에 사용했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의 박형준 대변인(왼쪽), 은진수 법률지원단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이 전 시장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논란에 대해 '도곡동 대지 매각 흐름도'를 보여주며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혹 해소될까**=이 전 시장측이 이날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과 관련한 자금흐름도를 전격 공개한 것은 지난 19일 검증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 캠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날 공개된 자금흐름도가 완전히 의혹을 해소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검증청문회에서는 이씨와 김씨가 이 땅을 사들일 때 투자비율이 53 대 47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은 68 대 32로 불균형하게 나눠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매각대금을 10년 넘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한나라 합동연설회 재개키로

내일 부산부터… 광주 유세는 내달 5일 실시

李-朴 질서유지 서약서 접수

한나라당은 2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잠정 중단한 지방 합동유세를 재개키로 했다.

당 경선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용)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최구식 위원회 대변인이 전했다.

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방유세를 중단하면서 내걸었던 2가지 조건이 충족됐다. 질서유지를 위한 각 캠프의 서약서가 접수됐고, 질서문란자 강제퇴장 등을 골자로 한 당의 계획안도 마련됐다"면서 "이 정도면 대회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합동연설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 부산 유세를 시작으로 앞으로 남은 12차례의 합동연설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당초 24일 열릴 예정이던 광주 유세는 내달 5일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앞서 이 전 시장측 박희태, 박 전 대표측 홍사덕 선대위원장은 경선관리위에 제출한 서약서에서 ▲플래카드와 피켓 등 응원도구의 행사장 내 반입 불허 ▲입장 자격이 없는 팬클럽이나 사조직 회원 등의 연설회장 입장 불허 ▲연설회장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선관위의 퇴장 결정 수용 등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경선일정 연기는 국민 기만"
원희룡 광주서 기자회견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원희룡 의원은 24일 예정됐던 한나라당 경선후보 광주 합동 연설회가 취소됐음에도 불구, 이날 광주를 예정대로 방문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행사 예정 장소였던 광주 구동 실내체육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몸싸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책임자를 가려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 앞에서 정견이 비교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후보를 결과적으로 편드는 양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朴, 이상득·이재오 윤리위 징계 요구

박형준·진수희·정두언 의원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은 2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핵심인사인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이재오 최고위원을 당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하도록 인명진 윤리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박 전 대표 캠프는 징계요구서에서 "이 부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북도지사가 노골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하고 다닌다. 언젠가 후회 막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살생부 발언을,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박 전 대표의 탈당 전후의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발언을 해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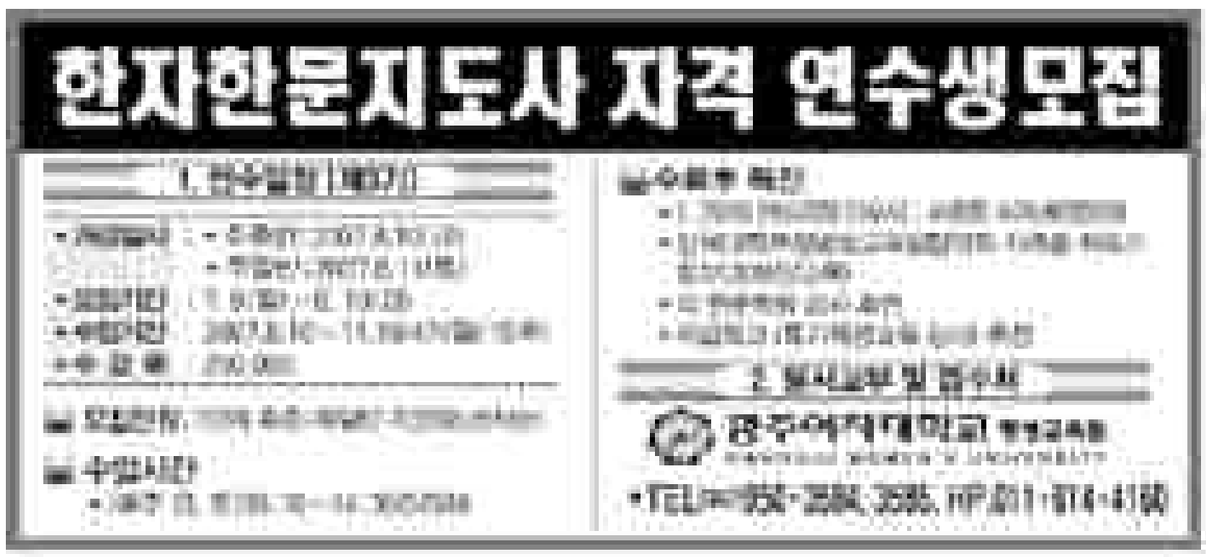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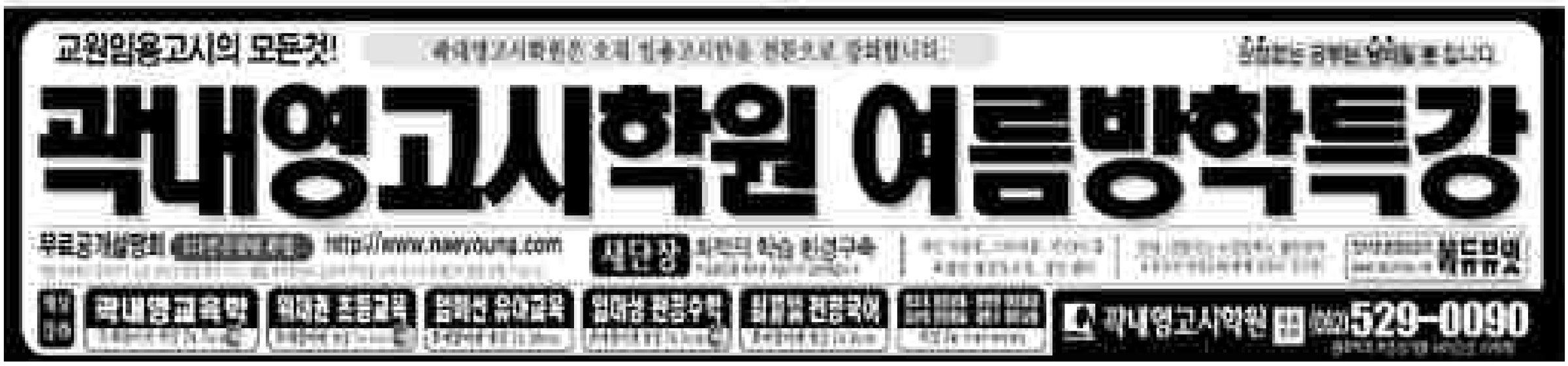
캠프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6억원 증여',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5·16 관련 발언' 등 검증청문회에서 나온 사실을 거론하며 박 전 대표를 공격한 이명박 캠프의 박형준, 진수희 대변인과 박영규 공보특보를 비롯해, 보도자료를 통해 '도곡동 땅 진실공방은 여권이 직접 출연한 것이고 박 전 대표 캠프가 협연한 것'이라고 주장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윤리위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

광주 동구청 최우수상

광주시 동구청(청장 유태명)이 '2007 민선4기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4일 경기도 포천시 반월트홀에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5개 분야)를 갖고 광주 동구에 대해 '공약이행과 관련 주민평가단 구성 및 관련 활동 분야'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이와 함께 광주 북구(공약이행계획서 작성과정)와 여수시(공약이행을 위한 제도·조직 정비), 보성군(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활동) 등 3개 기초단체도 각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